

중범죄 지어도 유지되는 의사 면허...국민 여론 '사늘'

의료사고 과실치사·성범죄 등 처벌 조항 삭제

10년 간 면허 재교부 103건 중 100건 승인

살인해도 면허 정지 안되는 전문직은 의사 뿐

2014년 가수 신해철의 의료사고로 기소됐던 의사 강모 씨는 2018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법정 구속됐다. 강씨는 구속되기 전까지 수 차례 자리를 옮겨가며 의사 생활을 계속했다. 강씨는 2017년 북동으로 전남 해남의 종합병원을 찾았던 환자 A씨에게 복막염 진단을 내리고 세 차례 개복 수술을 했다. 상태가 악화되자 A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이들 만에 사망했다.

강씨는 또 병원을 개원해 외국인 환자를 주로 받으며 수술을 계속했다. 그 사이 호주인 B씨가 강씨로부터 위소매절제술을 받고 사망했다. 강씨는 B씨 사망도 의료과실이 인정돼 금고 1년6개월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강씨는 이 사건으로 병원 문을 닫고 폐이닥터로 일했다. 그는 환자 C씨에게 복부성형, 지방흡입 수술을 하다 상해를 입혀 금고 1년2개월을 선고 받았다. 목숨을 잃는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 조치가 없었던 사이, 감옥에 가기 전까지 그가 집도한 수술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상해를 입었다.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은 비단 강씨 뿐이 아니다. 2007년에는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받으려 온 여성 환자를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지만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계속 진료를 보고 있다. 2018년에도 한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현행법으로 체포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역시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수차례의 금고형 선고에도 강씨 등이 진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의사면허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허위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진료비 부정 청구 ▲면허증 대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취득 ▲비도덕적 진료행위(일회용품 재사용)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

소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의사 243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이외에는 살인이나 성폭행, 절도 등 어떤 형사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아도 의사 면허는 유지된다. 2000년까지는 의료 사고에 따른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었으나 '의사들의 적극적 진료를 막는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과거에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의료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없었지만 이 역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사라졌다.

의사 면허 재교부도 손쉽게 이뤄진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취소 사유에 따라 1~3년 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면허 등록 규정을 위반해 취소된 경우에는 1년 후, 자격정지 중 의료 행위를 허가한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된 경우는 2년 후, 허위 진료비 청구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취소된 경우는 3년만 지나면 면허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아무리 심각한 경우라도 3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103명 중 100명이 승인됐다. 재교부율이 97%에 달한다. 2019년까지 신청된 75건은 모두 승인됐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

어지거나 개선(改後)의 점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신청만하면 다 주고 있어 사실상 '종신면허'라는 얘기도 나온다. 7명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심사위원회 7명 중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면허가 재발급 되는데, 심사위원회 4명이 의사다.

면허 재교부가 거부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산부인과 의사가 내연녀에게 약물을 과다투여해 살해한 사건이 거의 유일하다 시피한다.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는 2012년 자신의 내연녀에게 수면유도제 미다졸람 등 13가지 약물을 과다투여해 숨지게 하고 시체를 유기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그러나 과실치사나 사체유기가 아닌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출소한 뒤 그는 한 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일하다 퇴사했고, 2017년 8월 면허 재발급 신청을 했다. 유독 김씨 사건만 2년 여를 끄는 등 심사가 계속 보류됐으나 지난해 3월야야 최종적으로 발급이 거부됐다. 사회적 파장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현재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재발급 행정 소송을 낸 상태다.

살인 등 강력 범죄에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전문직은 의사 뿐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와 같은 전문직과 교사 등 공무원 등은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의사는



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게 면허 취소 조치를 내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살인 등 어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다. 의사에 의한 강력범죄 건수도 적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살인·강도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 이다. 이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전문직은 의사(613명), 종교인(547명), 예술인(499명), 교수(211명), 언론인(70명), 변호사(41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고 이상 실형을 선

고받은 의사는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만큼 면허가 취소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할 경우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무고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변호사와 의사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민정기자



코로나 19 물리치는 자원봉사자들 24일 울산 중구 동천체육관 주차장에 마련된 '개학 맞이 굿바이 코로나 울산 방역 류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집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광주 콜센터 집단감염 전담으로 불똥...혁신도시 주민 확진

나주 혁신도시 거주자 2명 확진, 우정정보센터 콜센터 전수검사

광주지역 고객센터(콜센터)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남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상무지구 광주도시공사 사옥 내 빛고을콜센터에서 발생한 라이나생명 관련 확진자 25명 중 전남 나주혁신도시 거주자 2명(2022번·2029번 확진자)이 포함됐다. 이 중 2022번 확진자의 가족이 혁신도시 내 우정사업정보센터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가족과 밀접 접촉한 우정사업정보센터 콜센터

일부 직원들로 검사를 확대했으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전수 검사를 할 계획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라이나생명 직원 중에는 나주혁신도시 거주자 3명과 화순 거주자 1명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지난 24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3명의 확진자(838번~840번)가 추가 발생했다. 838번 확진자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소 사장인 812번 확진자의 가족이고, 839번 확진자는 순천 거주자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840번 확진자는 해남군 산이면 거주자로 지난 19일부터 발열과 기침 등 유증상을 보여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840번 확진자 아내가 해남군 산이면의 한 교회 교인인 것으로 확인돼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광주에서 발생한 콜센터 집단감염이 동일 생활권인 전남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접촉자들을 파악해 선제 검사로 방역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